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EWSLETTER

2004년 8월 27일 발행 (월간 · 비매출) 등록 서울 라-02663(1982.4.29) 발행 · 편집인 이정환(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인쇄인 · 김재국/(인쇄 · 주)문우사)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평가 · 분석, 대응방향 논의 8월 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개최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평가 · 분석,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8월 9일 개최

우리 연구원은 8월 9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하케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농업인 등 1백여명이 참석, 최근에 타결된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한편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DDA 협상 가속도 붙여

세미나는 이정환 원장 사회로 열려 먼저 임영록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이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주요 내용 및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국장은 “이번 기본골격 타결로 작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실패 이후 소강상태였던 DDA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농업분야에서 민감품목을 각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민감품목 보다

더 큰 신축성을 부여하는 개도국 특별품목이 도입된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DDA 농업협상 모델러티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국장은 이번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 있어 구체적인 협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관세·보조금 감축률 최소화가 과제임을 피력했다.

블루박스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세 번째 주제 발표자인 우리 연구원 임승수 연구위원은 ‘국내보조와 수출경쟁에 대한 기본골격의 전(前)이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협상과제로 “향후 협상에서 감축보조(AMS)는 협상여지가 많지 않으며 블루박스는 우리 실정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린 박스 협상이 재개될 경우 비교역관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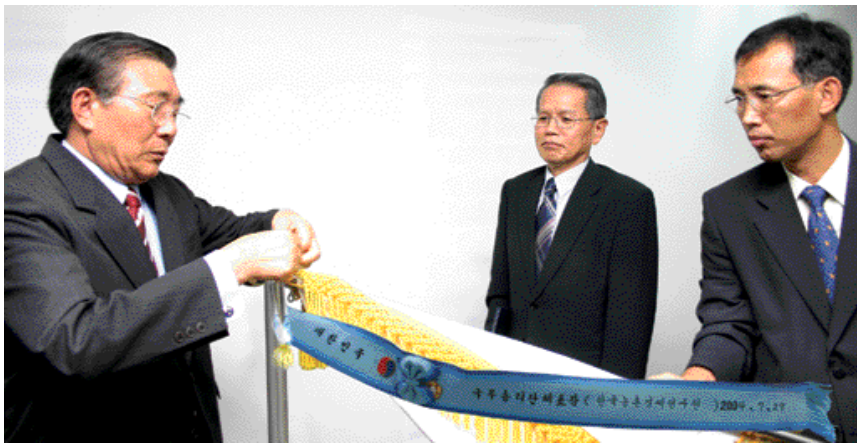
(NTC)의 추가반영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인 우리 연구원 서진교 쌀·DDA 농업협상대책연구단장은 ‘시장접근분야의 기본골격의 이해와 평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서단장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 입장에서 민감품목의 융통성확보는 성과이나 관세감축공식과 관세상한 부분은 부정적이어서 현단계에서 관세상한 설정여부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쉽게 관세상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민감품목 문제에 초첨

이어진 토론에서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협상결과는 2008년쯤에나 실제로 이행될 상황이므로 쌀을 관세화하면 의무수입량 증량 없이 2008년까지 갈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농협조사연구소 통상연구실장은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하는 개도국의 최소허용보조는 감축을 면제하므로, 가축농과 생계농이 많은 우리 농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민감품목이 일반품목과 마찬가지로 구간별 감축방식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는 쌀 관세화 유예의 유·불리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그 동안 협상 참여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쌀협상에 있어서 관세화 유예의 합리적 관철방법을 모색하고, 개도국지위유예에 협상력을 모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우리 연구원이 2003년 평가에서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

우리 연구원이 2003년 경제사회연구회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 16일 경제사회연구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정책연구강화와 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전문가네트워크 강화 및 농업·농촌분야의 지식허브 역할 수행, 경영합리화를 위한 관리운영시스템 개선, 활기찬 직장문화의 조성, 환경개선 등을 이룬 것이 높게 평가되어 이번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이날 조태희 부연구위원도 국무조정실장상을 받았다.

KREI 아침편지 1주년 연구원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

우리 연구원 홍보팀이 매일 아침 원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연구원 문화 창달을 위해 시작한 'KREI 아침편지'가 지난 8월 4일로 1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직원들의 성원 속에 연구원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KREI 아침편지'는 홍보팀 이경미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음악과 정보로 꾸며 발송하고 있다.

'KREI 아침편지'의 요일별 콘텐츠를 소개하면 월요일엔 좋은 글, 화요일엔 시, 수요일엔 유머, 목요일엔 건강, 금요일엔 레저 정보를 연구원의 주요행사와 함께 담아 직원들과 연우회원, 외부인 중 희망하는 곳에 E-

mail로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1주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축하메세지를 보내왔다.

우리 연구원의 'KREI 아침편지'를 받아보길 원하면 이경미(02-3299-4254, E mail: nebdae@krei.re.kr) 씨에게 문의하면 된다.

벤처농업 전반기 강좌 성료

우리 연구원 벤처농업창업교육센터는 7월 30일 전남 보성 서편제 소리전수관에서 2004년 전반기 강좌를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날 벤처농업강좌에는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우리 연구원 허길행 부원장이 개최사를 하고 하승완 보성

군수가 축사를 했다.

이날 강좌는 조호현 한국자연농업협회 전남도 회장이 '친환경 과수재배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 윤명숙 전 조선대기술대학 교수가 '농산물디자인 효과와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전남농업기술원 김정근 박사가 '1차 농산물의 유통체계'란 제목으로, 우리 연구원 박시현 연구위원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벤처농업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하고 현장견학을 하여 교육효과를 더욱 높였다.

올해 후반기에도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벤처농업인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벤처농업강좌를 개설, 벤처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포럼 온라인 토론

연구원이 운영하는 협동조합포럼(운영자 박성재 연구위원)은 충남대 박종수 교수가 작성한 '협동조합 개혁방향과 과제'라는 논문을 토대로 농업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KREI 협동조합 포럼(forum.krei.re.kr) 토론광장(협동조합)에 올려져 있는 박교수의 논문에는 농협개혁의 필요성, 농협개혁의 방향과 과제, 외국의 농협개혁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포럼 회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기대된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술포럼 개설

우리 연구원은 전통주와 민속주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지식공유를 위해 우리술포럼을 개설했다.

우리술의 주요 이슈와 주류업계 소식 전달, 우리술의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발전 방향 논의, 우리술 발전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을 대표로 하여 개설돼 향후 활동에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술포럼은 우리술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술 전문가 및 현장 시업가를 초청해 강연회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우리술에 관한 주세법 등 관련 규제, 통계 그리고 정책

에 관한 자료수집 및 공유, 우리술 활성화를 위한 성공사례연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포럼은 우리술포럼 웹사이트(forum.krei.re.kr)를 통해 자료실에 우리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게시하고 술이야기방을 만들어 우리술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제조방법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의 명주도 소개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 중이며 토론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술포럼에 관한 것은 박경철 연구원(☎02 3299 4237, kcpark@krei.re.kr)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 국민적 합의 선행 중요”



한·아세안 FTA 공청회를 8월 25일 무역협회에서 개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관련 공청회가 지난 8월 4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 주최, 우리 연구원을 비롯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나라 농업에 영향을 줄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려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공청회 개최식에 이어 김한수 FTA 담당심의관이 한·아세안 FTA 추진 동향을 보고했다. 김 심의관은 아세안은 우리의 5대 교역국으로 중요한 수출 및 투자 대상국으로 현재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아세안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우리도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사회로 ‘한·아세안 FTA 추진 필요성’이란 주제로 공청회가 열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을 동서남아팀장이 ‘아세안의 FTA 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란 제목으로,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한·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했다.

우리 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한·아세안 간에 FTA가 체결되면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농민들로부터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선임연구위원은 “FTA 체결에 있어 농산물을 특별취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런

점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해야 하며, 검역조치를 엄격히 해 수입규제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주제는 ‘한·아세안 FTA 협상시 고려사항’이란 제목으로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현오석 소장 사회로 열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가 ‘교역 및 투자 부문의 대응방안 및 기대효과’란 제목으로,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한·아세안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서울대 김한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수출하는 것

은 1억불인 반면, 수입은 5~6억불에 달한다”고 밝히고, “특히 과실류는 열대과일을 중심으로 한 수입증가와 소비 대체 효과가 이에 상응하는 국내생산 감소를 야기하여 시장개방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초청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은 지난 7월 29일 중회의실에서 중국절강대학교 관리학원 판 웨이구왕 부교수를 초청, ‘중국어와 한국의 농산물 경쟁력 비교’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생산성연구포럼 세미나 가져

우리 연구원 농업생산성연구포럼(운영자 김용택 연구위원)은 지난 8월 24일 서울대 농경제학부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운 박사와 서울대 안동환 박사가 주제 발표한 뒤 토론했다. 이어 DEA, SFA, Stochastic DAE 등 생산성 연구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KREI 교양강좌 ‘백두대간’ 주제로 강의



김하돈 시인이 ‘백두대간’이란 주제로 8월 23일 강의

우리 연구원은 8월 23일 김하돈 시인을 초청해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우리 국토의 올바른 땅읽기’란 제목으로 KREI 교양강좌를 가졌다.

이날 강좌에는 50여명이 참석해 우리 국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환경운동가인 김하돈 시인은 일본이 국토에 매장된 광물의 수탈

을 목적으로 산맥을 근거로 교육해 우리나라의 실제의 생김새 및 실제로 용기해 있는 산맥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인은 “우리 국토는 백두산을 기준으로 하

여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진 실제의 산맥들이 용기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10대강의 유역을 구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좌는 우리나라 산출기의 근간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슬라이드를 상영하며 우리 국토의 실제의 생김새에 대해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DDA 기본골격의 뜻풀이

임 송 수 연구위원

8월 1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협상을 위한 기본골격이 타결됐다.

일곱 쪽의 농업부문 기본골격은 법적인 지위가 없는 문서지만 도하 각료 위임사항인 실질적인 감축과 개선을 통한 농정개혁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제시된 두 가지 개념이 조화원칙과 비례원칙이다.

조화원칙 vs 비례원칙

조화원칙은 관세나 보조 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이 줄임으로써 회원국 및 품목 사이의 수준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관세나 보조 수준의 높낮이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로 다른 감축률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원칙은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적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방식이다. 모든 회원국들이 공통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GATT의 상호주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개도국에 낮은 감축수준과 더 긴 이행기간을 허용함으로써 무역체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높은 관세는 더 많이 낮춰야

기본골격은 관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줄이도록 요구한다. 그렇다면 관세율이 360%인 마늘은 130%인 양파와 다른 구간으로 분류돼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평균 관세율이 64%로 높은 편이고, 관세율 100% 이상인 이른바 고관세 품목이 46개로 많은 우리나라에 이런 구간별 감축방식은 큰 폭의 감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품목보다 관세를 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융통성의 대가는 더 많은 관세할당(TRQ) 물량을 내주는 것이다. 관세를 덜 깎으려면 그 만큼 낮은 관세로 들어오는 물

량을 올려주는 처방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고구마, 감자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농촌 삶의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일부 품목을 특별 품목(SP)으로 지정해 민감 품목보다 관세감축과 TRQ 증량 측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별 품목의 수입이 빠르게 늘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발동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SSM)도 설정됐다.

관세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 상한 설정은 수입국과 미국의 참여한 대립으로 나중 협상에서 결정하도록 미뤄졌다. 예를 들어, 관세 상한이 150%로 설정되면 그 이상의 관세는 모두 15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는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에 아주 불리한 규정이다.

AMS는 줄고 블루박스는 남아

관세와 마찬가지로 가격과 생산보조도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EU와 일본은 미국보다 더 많이 보조를 줄여야 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게 줄이게 된다.

가격과 생산보조의 합을 이행 첫해에 20% 감축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집행한 수준이 아니라 최대 허용된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허용된 감축 대상 보조(AMS)의 평균 94%를 사용하고 있지만 블루박스 보조가 없고 최소 허용보조는 2000년 현재 허용된 수준의 16%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MS 감축으로 수매제와 같은 가격 및 생산보조 조치를 더 줄여야 한다. 또한 과거 지원실적에 따라 설정하는 품목별 AMS 상한으로 쌀, 보리, 옥수수, 누에고치, 유채 등 5개 품목에 한정해서

AMS 조치를 쓸 수 밖에 없게 됐다. 다른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조는 이제 최소 허용보조나 블루박스만 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블루박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농업생산액의 5% 선에서 이 조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정의 신축성 확보 측면에서 잘된 일이다. 허용보조인 그린박스는 다음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수출보조가 철폐된다. 또한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등에 내재된 수출보조 부분도 함께 없애지게 됐다. 그러나 개도국은 수출보조 철폐 이후에도 얼마 동안 수출용 농산물의 유통비용과 국제수송 및 운송비용에 대해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세부원칙 협상이 관건

DDA 협상 시한이 2005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때까지 연장됐다. 세부원칙 협상은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골격 때보다 더욱 어렵게 진행될 것이어서 2007년이 지나야 최종 협상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과 EU 양자의 전통적인 협상구도가 이제는 개도국 대표 브라질이 가세한 삼자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서 선진국 농정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욱 강해졌고, 이에 따라 개도국이지만 선진국형 농정을 추구해온 우리나라가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세부원칙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점진적인 농정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신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민감 품목수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이나 의무적 TRQ 증량이 배제 또는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교역적 기능(NTC)이 모든 분야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 >

쌀 협상의 쟁점과 협상 전략

서진교 부연구위원

도하개발아젠다(DDA)가 기본골격의 합의도출로 일단락되자 쌀 협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및 중국과의 3차 접촉을 끝낸 쌀 협상은 그동안 탐색전 성격에서 관세화유예의 조건을 놓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고받는 수 치협상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쌀 협상 결과를 보면 협상의 쟁점은 유예기간과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증량 수준, 그리고 MMA관리방식 및 타 품목과의 연계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관세화 유예 10년은 어려워

관세화 유예기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현재와 같은 10년의 유예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 상대국들의 공통된 반응은 10년의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예기간 10년은 DDA를 고려할 때 개도국지위와 연계된다. 이번에 합의된 DDA 기본골격엔 이행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하빈슨초안에서는 개도국의 이행기간으로 10년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금도 DDA 농업협상에서는 암묵적으로 10년의 이행기간이 개도국 우대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DDA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0년의 유예기간에 상당한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10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유예기간이 10년 보다 짧아질 경우 관세화유예의 장점이 상당히 훼손된다. DDA의 타결은 빨라야 2005년 말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실제 이행은 1년간의 국내절차를 거쳐 2007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관세화유예의 시작은 2005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DDA를 감안하면 10년의 유예기간은 실질적으로 8년이 되며, 10년 보다 짧아진다면 실질적

유예기간도 따라서 줄어들 것이다.

MMA 증량 수준은 앞에서 언급한 유예기간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유예기간이 길면 갈수록 MMA 증량 수준도 커진다. MMA 증량과 관련하여 미국 및 중국이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물론 협상카드로서 향후 그 요구수준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협상의 시작점으로서 그 의미는 향후 우리의 대응전략의 수립에 출발점이기도 하다.

MMA 관리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현재와 같은 국영무역을 통한 관리다. 그러나 상대국들은 수입쌀의 국내시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과 대만의 예를 볼 때, 관세화유예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외국산 쌀의 국내시장 유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쌀협상 공격적 전략 필요

향후 남은 쌀 협상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의 쌀 협상 전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관세화카드를 협상에서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가을 이후 쌀의 국제 가격은 재고감소로 인하여 꾸준히 상승하여 톤당 5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의 곡물수급 상황도 상당히 악화되어 중국내에서 쌀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세계 주요 연구기관에서 향후 10년간 국제 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DDA 기본골격에 따르면 쌀의 특별품목화를 통해 추가적인 시장개방 폭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관세화시 예상되는 추가적인 쌀 수입량이 많지 않음을 상대국에게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래야만 상대국들도 유예를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관세화유예에만 목을 매단 상태에서 우리의 협상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상대국들 역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세화카드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관세화와 유예를 선택할 때는 엄격한 동등성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물론 계량분석 자체가 가지는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먹구구식 계산에 기초해서 판단해서도 곤란하다. 관세화와 유예기간의 득실을 최대한 엄격히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협상전략은 이를 기초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냥 우리 쌀 산업의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수준이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단계는 지났다.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모전 피하고 지혜모아야

마지막으로 생산자인 농업인은 정부의 협상대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농정 불신이라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신 농업인들은 보다 실질적인 국내보완대책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정부도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시급히 해소시켜 주기 위해 실천적인 소득안정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쌀 협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인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기대해 본다. < >

동북아의 곡물수입 확대와 협력가능성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시장개방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의 농산물수급 불균형이 현저해지고 있다. 특히, 곡물의 경우 동북아지역은 북미와 남미의 거대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미 항구적인 수입국이다. 최근 중국도 이 전철을 밟고 있다. 한·중·일 3국 모두 곡물 순수입국으로 위치하면서 미국과 브라질의 중요한 고객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실태와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 농업부 전망에 의하면, 2004년도 한·중·일 3국의 쌀, 소맥, 옥수수, 대두 등 4대 작물 순수입량은 한국이 1,430만톤, 일본은 2,750만톤, 그리고 중국은 2,71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국의 합계는 6,890만톤으로 세계 무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요인은 중국의 생산감소와 소비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쌀 이외의 소비량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중국에서도 최근 수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2004년도 쌀은 수출 120만톤, 수입 130만톤으로 거의 자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맥과 대두는 각각 800만톤, 2,300만톤 수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대두 자급률은 4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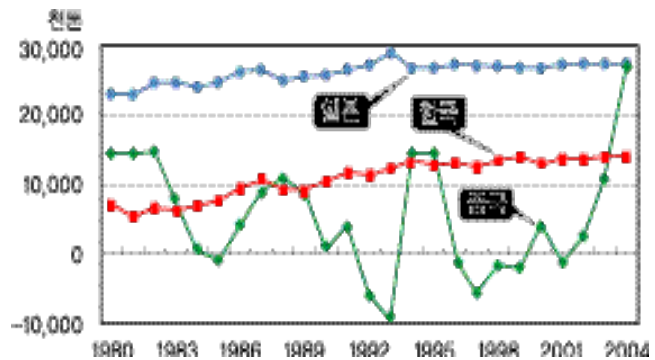
중국의 옥수수 수입가능성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옥수수의 동향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사료용 등으로 대량 수입하고 있으나, 그 추이는 정체하고 있다. 중국은 옥수수가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다. 옥수수 수출을 1990년대 초반 1,100만톤, 2002년도는 1,500만톤까지 늘린 적이 있다. 그 이후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로 수출이 감소하여 2004년도는 4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옥수수의 세계 3대 수출국은 미국, 중국, 브라질이다. 미국의 수출 점유율이 68%나 차지하는 등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브라질의 수출도 연간 400만톤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생산이 정체하는 가운데 수출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과 하북성이 옥수수 4대 산지이다. 길림성 등 주요산지에서는 2002년도부터 옥수수, 쌀, 대두를 대상으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가격지지를 계속하고 있으나 생산은 기대했던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식부면적 확대와 단수 증가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의 4대 작물 순수입량 추이



세계 곡물무역의 구도변화

한편, 소비는 제유용과 사료용이 급신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는 식용유 공장의 설비 투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또, 육류 수입을 통하여 가축생산량을 감소하지 않는 한 사료용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생산구조이다. 때문에 옥수수 수입국화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주식용을 포함하여 사료용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은 이미 쌀을 제외한 소맥, 옥수수 등 곡물과 대두의 항상적인 수입국으로 전락하여, 소비량의 7할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소맥과 대두는 이미 수입에 의존하는 체제이다. 또, 옥수수의 수입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수입', '남북미 수출'이라는 무역구도가 고착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는 한 동북아에 곡물수급의 불안요인은 현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서 중국도 수입국으로 전락한다면 세계 곡물시장에 불안요인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소비 증가와 생산 변동에 수반한 중국의 곡물수급 사정이 향후 미국과 남미 곡물의 거대 소비시장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한다면, 동북아의 관점에서 식량안보의 확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옥수수에 대해서는 2003년도 이미 한국과 일본은 각각 950만톤, 1,680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 3성은 옥수수와 쌀의 주산지이다. 주요 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자급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3국간 협력을 통하여 옥수수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대해 공동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김태근 부연구위원>

농업 개방폭 확대 불가피 관측...구조개혁 착수

DDA 기본골격 합의...관세상한 철폐 등 관건 전망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관세상한 설정 등을 놓고 난항을 거듭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가 7월 31일 DDA 세부초안 마련을 위한 기본골격 합의안을 일반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급진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각국은 기본골격 합의안에 대해 특별품목에 대한 의무수입 물량 증량 면제 등을 협상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 등 수출국 주장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특히, 쌀 협상에서도 의무수입 물량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는 등 농업 개방폭 확대를 우려하였다.

DDA 기본골격 합의 이후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개방속도를 늦추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REI는 모델리티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관세상한의 철폐와 함께 민감품목의 최소 개수 확보 및 TRQ(의무수입물량) 확대 최소화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등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DDA협상 기본골격 합의는 공산품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도 농업의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보였다.

농지법 개정안 “투기방지대책 미흡” 여론

농림부는 7월 22일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5년 이상 장기 임대 조건으로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고, 도시민이나 기업도 농업회사 지분을 7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하였다.

언론들은 농업구조가 기업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투기방지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고, 전농 등 농민단체는 이를 ‘농지 투기법’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으며, 학계 일부에서도 장기적인 농지이용 계획없이 규제를 푸는 것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특위는 농지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부처의 제도정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성시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국회는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쌀 재협상서 각국 ‘관세화’ 원칙 고수

쌀 관세화 협상은 9개국과 2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8월 13일 미국을 시작으로 3차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한국〉은 네티즌 64%가 관세화에 찬성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전농 등 농민단체를 비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쌀 재협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DDA 기본골격 합의안에 따라 한국의 쌀 재협상도 도하협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결시한이 내년말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모든 논의는 2004년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협상 시한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한편, 2차 협상을 마무리 한 시점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무역자유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관세화 유예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관세화 유예를 수용한다는 나라는 호주와 이집트 2개국이었으나, 이들 국가도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수입개방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수매제 폐지 논란

농림부는 8월 3일 추곡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농 등 농민단체는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으며, 학계 일부에서는 수매제를 폐지하되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동아〉 등 중앙언론은 대부분 추곡수매제 폐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논평하면서도, 쌀 재배 농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질적인 법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반면, 〈광주〉, 〈전북〉, 〈국제〉 등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언론들은 수매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설을 발표하는 등 농업해법에 대한 중앙과 지역언론간의 인식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가당 평균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한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8월 2일 발표하였으며, 이에 농민단체는 “규모와 경쟁력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가족농가 육성 등의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학계 일부에서도 규모화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PDA 이용 산지정보 수집체계 개선 사업 착수

향후 농업관측사업의 획기적 개선 기대



지난 8월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PDA 사업 착수보고회

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한 산지 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이 8월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에 PDA사업을 맡은 대신정보통신은 하이콤과 SKT를 협력업체로 본 사업을 진행한다. PDA를 활용한 산지 정보수집체계 개선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 8월 24일 시작해 내년 1월 31일에 마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전화조사원, 팩스, 이메일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자료 수집방식이 인터넷, PDA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각 지역에 있는 모니터요원에게는 장소에 구애 없이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하도록 PDA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사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의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페이지 없이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표 작성 및 수집이 웹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조사자료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관측품목에 대한 조사 이외에도 소비자패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도 가능해져 향후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진행중인 농림부 유관기관 DB공유 프로젝트에도 동시에 참여하여 기존에 구축하지 못했던 다양한 농림관련자료와 기상자료도 실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관측정보센터 내의 모든 시스템은 원내의 다른 홈페이지와 SSO(Single Sign On)환경이 구축되어 한번의 로그인으로 관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운영중인 농업관측정보센터홈페이지도 리뉴얼을 통해 중문, 영문 소개 페이지의 제작과 운영방식도 자동화가 진행될 예정이고, 정부, 국회, 언론기관 등에 제공중인 농업관측정보의 푸시메일도 새롭게 개편하여 자동화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워크숍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소득격차 완화 방안’ 연구관련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을 8월 9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연구해온 결과를 이동필 선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소득격차 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산지폐잔재 이용 세미나

우리 연구원 산림정책연구실은 7월 27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산지폐잔재 활용을 위한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가졌고, 7월 29일에는 국민대 산림지원학과 회의실에서 ‘목질계 열에너지의 경제성 분석’이란 주제로 연구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구진 동정

△이정환 원장은 8월 10일 영남대에서 영남지역농정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방화 시대 한국농업의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이란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이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하게 되었다.

△박동규 연구위원은 8월 10일 영남대에서 영남지역농정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쌀농가 소득안정화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또한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DFA 농업협상 및 쌀협상의 동향과 쟁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기환 연구위원은 제11차 세계농촌사회학대회 및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이사회 참석을 위해 7월 23일 노르웨이로 출국했다가 이란을 거쳐 8월 8일 귀국했다.

△어명근 연구위원은 한·EFTA FTA 체결협상을 위한 제1차 공동연구회에 참석키 위해 8월 10일 스위스로 출국해 회기에 참석하고 15일 귀국했다.

△송주호 연구위원은 8월 25일 aT센터에서 열린 OECD 농업자문단회의에서 ‘OECD 축산환경과 우리나라의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또한 김창길 연구위원은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논의 동향 및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태곤 부연구위원은 중국 길림농업대학에서 열린 동북아농업구조연구회의에 참석키 위해 8월 15일 출국했다 20일 귀국했다.

△권오복 부연구위원은 외교통상부가 7월 27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남미간 농업협력증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성주인 연구원은 태국에서 APO 주최로 열린 ‘한마을 한상품 운동’ 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8월 16일 출국했다 24일 귀국했다.

연구원 인사

△(복직) 부연구위원 정민국

△(휴직) 전문연구원 서대석